

여야, 라·스 수사 '공수처 vs 특검' 대결

〈리임·옵티머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野 연루 정치인 공수처 1호 대상...출범 지연시 패트 불사" 국민의힘 "정권 실세 개입 의혹 특검 불가피...장외투쟁 고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자 여야가 라임·옵티머스 특검 및 공수처 출범을 놓고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맞물려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야권은 특검안으로 맞서며 정국에는 이미 적신호가 들어왔다.

민주당은 야당 정치인 연루설까지 불거진 라임 사건을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꼽으면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야당의 지연전술식 법 개정으로 돌파하겠다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까지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실세들까지 뺀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의원총회를 열어 여권을 규탄하는 동시에 '심야 농성'에

들어갈 태세다. '장외투쟁'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만약 국민의힘이 '장의 카드'를 꺼내 든다면, 여야가 극단적으로 충돌한 지난해 11월의 패스트트랙 정국이 재현할 수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시행 식달여만인 27일 국민의힘이 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한 것과 관련, 더는 출범 작업을 미룰 수 없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추천위에서 '비토권'을 행사해 절차를 지연시킨다면 이를 돌파하기 위한 법 개정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기류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t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방해하며 무한 도돌이표를 작동한다면 국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민주

당은 준비해뒀다가 바로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리적이고 자격이 되는 분이 추천됐음에도, 만약에 도돌이표를(거부권 행사)을 세 번까지 한다면 법적·제도적 자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야당의 특검 주장에는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정쟁용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제1야당의 민생 포기 선언"이라고 맹비난했다. 염태영 최고위원도 BBS 라디오에서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특검을 주장해야 한다"면서 "특검보다 공수처가 먼저"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에 협조한 만큼, 여당도 특검 도입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임정현 이전 변호사를 추천위원으로 하는 추천서를 제출한 후 "국회를 더는 정쟁의 장으

로 내둘 수 없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여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실체를 밝히는 특검 도입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결정적수가 '7명 중 6명'으로 규정된 현행 법에 따라 야당 측 위원 2명이 가지는 사실상 '비토권'을 향후 민주당과의 특검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수처의 경우 일단 추천위원을 선정하기는 했으나, 현행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사위에서 민주당을 상대로 '독소조항' 제거를 명분으로 법 개정 역공세를 함께 펼 전망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통화에서 "여당이 패스트트랙 충돌을 거치며 주도한 현행 공수처법에 이미 위헌요소가 다분한데, 이를 다시 맞대로 고치려고 한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민주 "정치검찰 윤석열 사퇴해야"

김두관 "공수처 막으려 몽니"... 김남국 "지휘 거부, 직 걸어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거론하며 윤 총장을 압박했다.

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2019년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당연히 중앙지검장에게 보고가 됐어야 하는 사건인데 보고가 정말 안 됐는지, 안 됐다면 왜 안 됐는지를 제대로 봐야 한다. 검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에도 "만났다고 봐야 한다. 검사윤리강령에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위법한 사항이 있고 중대한 결과가 났다면 총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추미에) 장관의 해임건의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의 행위는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다.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고 공수처 출범을 막

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은 우리 시대의 마지막 정치검찰로 기록될 것"이라며 "윤 총장은 더는 검찰 집단의 이익을 위해 몽니를 부리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라임 사건 수사지휘를 둘러싸고 윤 총장이 추미에 법무부 장관과 벌인 갈등을 두고 "옛날 같으면 '당신 사표 내고 나가서 이야기해라'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잘못됐다고 주장한다면, 당당히 검찰총장의 직을 걸고 하면 되는 것"이라며 "정치를 하고 싶으면 정치를 해야지, 왜 검찰총장직에 앉아 정치적 행보를 하느냐"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거듭 일축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민주, 공수처 연내 출범 '속도'

법사위 의원 10명, 13건 법 개정안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에 속도를 내며 관련 법 체계 정비에도 나섰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간사인 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은 전날 13건의 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불법정지처 등 몰수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대한 특례법·통신비밀보호법·변호사법 등의 대상 기관에 공수처, 공수처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았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에 불법 재산 등과 관련한 형사사건의 수사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 국가인권위가 수사 개시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 기관 등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국제 공조를 요청할 때 공수처장 또는 공수처 소속 검사가 검찰총장을 경유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변호사에 대한 법조윤리협회의 위원장의 수사 의뢰 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민주,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공천 공론화 시기 고심

'원인 제공시 불출마' 규정 수정 가다... 연내 전 당원 투표 유력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공론화 시기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공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기류지만,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들의 소속 정당으로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천 여부를 결정할지가 관건이다. 여기에 공천을 하더라도 승리를 자신할 수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일단 당 내외에서는 정치적 명분 확보 차원에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해 공천 여부나 당원·당규 개정 여부를 묻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공천의 명분을 당원들의 뜻으로 치환하겠다는 것이다. 또 올해 내에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해 공천 논란을 마무리 짓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당원·당규 개정문제는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현행 규정에 '최고위 의결이 있을 경우 탈리한다'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원·당규에 선불리 손을 대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정치적으로 결단하자는 주장도 있다. 다만 이

런 절차를 거치더라도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기존 당원·당규에 반하는 결정으로 해석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최대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공론화와 동시에 공천 여부를 속속속결로 결정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공론화를 시작하는 순간 이낙연 대표의 대국민 메시지와 전당원 투표, 최고위 의결 등의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 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내년 4월 재보선 공천 여부에 대해 "늦기 전에 책임 있게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없다"며 "공론화를 일찍 시작해 매를 미리 맞는 것이 나을지, 나중에 맞는 것이 나을지의 판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박영선 중기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상호·박종진·박주민 의원 등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거론하고 있지만 방역의 주역을 정치권에 끌어들이는 것은 오히려 역풍을 부릴 수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또 부산시장 후보로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김해영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김희재, 관광도로 정비지구 지정제 도입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 국회의원은 27일 "그동안 모호했던 관광도로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관광도로 정비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관광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희재 의원은 "노르웨이는 피오르드식 해안 절경을 국립관광도로로 지정해 국제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했다"며, "우리나라

도 이에 못지 않은 해안 절경이 많은데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관광도로 지정을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관광 수요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를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안과 1566-9988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6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진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